



---

문서번호 : 16-11-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0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 목 : [민변][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전송일자 : 2016. 11. 10.(목)  
전송매수 : 총 2매

---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과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일 특위를 구성하여 발족했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와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 문란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했다.

###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

적 해석과 책임’,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 헌정질서 파괴’가 현 사태의 본질임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로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퇴진하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최순실 등 특정 개인의 비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현